

조국 신당설이 잠들지 않는 이유

태평로



백성규
논설위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소했다. 아들도 연세대 석사 학위를 돌린 반값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여론 무마용이란 해석이 많다. 딸이 기소를 면하면 정치에 뛰어들 것 이란 관측도 적잖다.

흔란스러운 민주당 상황도 신당설에 한몫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까지 굳건하다면 조국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친명대 비명 같음이 격해지면 조 전 장관과 외곽 세력에 공간이 생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와 독대 술자리를

여야, 코미디 선거법 3년 방치
준연동형 기법 '조국 비례당'
위성 정당 금지 댄 어부지리 대박
내로남불 대명사 부활 길 여나

가진 것도 그에 대한 후원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진짜 숨은 변수는 선거법이다. 여야는 비례 위성 정당이란 조유의 사태를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년 넘게 방치해 왔다. 아무도 이해 못 할 문제투성이 선거법이란 비판에도 개정 논의 한 번 한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위

성 정당은 문제지만 준연동형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정의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소 정당들과 아합해 이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의석을 빼

앗지 않으려면 3년 전처럼 다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재연되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야권에선 최소한 위성 정당 만이라도 금지하는 조항을 두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법안도 발의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 정당을 금지하면 신생·군소 정당들이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를 노리고 '조국 비례당'을 띄운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다. 민주당 안팎의 비례 출마 희망자 상당수가 조국 신당을 기웃거릴 것이다. 민주당도 조국 신당과 뭉칠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조국이 총선의 전면에 서게 된다. 지역구 당선이나 유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정치적 복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만대장경'을 써온 그가 이를 마다하겠나.

여야는 그동안 선거구제를 개편하며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여는 호들갑을 떨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꺼냈지만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 현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법 조항도 고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무법(無法) 선거법'을 만들었다. 비례 위성 정당을 넣은 코미디 선거법은 단순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눈치를 보며 막판까지 끌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럴수록 조국 신당의 에너지는 커질 것이다. 국회의 직무 유기가 그에게 부활 길을 터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김준의 맛과 섬 [149]

여자만 대갱이 무침

오래전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 무안 봉탄장에 대목장이 열렸다. 늘 그렇듯이 어릴적부터 둘러보다 김복은 막 대기를 한 다발 묶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건어물전에 한약재일 리는 없고 무엇일까 궁금했다.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크기는 한 뼘 남짓하고 입을 벌린 채 말렸는데 날카로운 이빨이 뚜렷했다.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는데 주인이 '대갱이'라며,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꼭 사간다고 했다. 어머니 손맛에 길들여진 자식들이 고향맛을 가져가자 신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입맛을 다시게 하는 맛이다. 봉탄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최상품의 숭어가 잡히는 감탕 필이 있었다. 대갱이가 자라기 좋은 곳이다. 지금 전남 여수시의 여자만처럼. 그 후로 같은 건어물을 순천아랫장, 벌

교장, 염산장 등에서 보곤 했다. 대갱이는 갯벌에 기대어 사는 농어목 망둑어과 어류이다. 어류도감에는 '개갱이'이라 하지만 여자만 사람들은 '대갱이' 혹은 '운구지'라고 한다. 필갯벌 50cm 깊이에 만든 대어섯 개의 서식 굴에 살며, 작은 갑각류나 조개류를 먹고 산다. 여자만 순천 별파리나 별교호 동 갯벌에서는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해 잡는다. 갯벌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이사하야만 사가 갯벌에서도 대갱이를 잡는 어민을 보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여자만 바닷마을에는 빨랫줄에 대갱이를 줄지어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살아 있을 때는 삶은 후 살을 발라 시래기를 넣고 추어탕처럼 끓이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은 말려 두었다가 양념과 버무린 '대갱이 무침'이다. 북어 대신 방망이로 두들겨서 찢어 구운 다음 양념을 더해 무쳐낸다. 비린내도 없고 북어포보다 고소하고 중독성이 있어 즐겨 먹었다. 도시에서 햄이나 계란말이를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친구들도 바퀴 먹자고 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어른들은 양념에 무치지 않고 구워서 술안주로 즐긴다. 대갱이탕이 어른들 보양식이라면 대갱이무침은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었다. 흔하던 대갱이도 점점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국제슬로푸드네 대갱이를 보전해야 할 지역음식으로 '맛의 방주'에 등재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이 무침'이다. 북어 대신 방망이로 두들겨서 찢어 구운 다음 양념을 더해 무쳐낸다. 비린내도 없고 북어포보다 고소하고 중독성이 있어 즐겨 먹었다. 도시에서 햄이나 계란말이를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친구들도 바퀴 먹자고 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 어른들은 양념에 무치지 않고 구워서 술안주로 즐긴다. 대갱이탕이 어른들 보양식이라면 대갱이무침은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었다. 흔하던 대갱이도 점점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국제슬로푸드네 대갱이를 보전해야 할 지역음식으로 '맛의 방주'에 등재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28년 전 '삼풍백화점'이 그대로, 한국 건설의 질긴 악습과 인습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 조사에서 아예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짓거나 기본적인 하중 계산도 하지 않는 등 우리 건설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무량구조 공법 아파트는 보가 없어 기둥 주변의 철근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인건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안전의 핵심인 전단 보강근이 아예 설계에서 누락되고, 현장 근로자가 도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엉뚱한 곳에 배근을 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했다. 정부가 LH 이외에 무량관 구조를 도입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추가 조사하면, 부실시공된 아파트가 더 드러날 것이다. 국내 부실 아파트 현장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해외 건설 세계 5위가 맞나 싶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관 구조는 28년 전 건물이 무너져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에도 사용된 공법이다. 설계상으로는 기둥과 슬래브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지판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판 두께가 얇거나 아예 없어 무리한 구조 변경과 함께 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됐다. 당시에는 지판을 빼먹었다면, 현재는 철근을 누락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지난해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부실한 콘크리트 품질과 타설 도중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LH의 사후 대응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드러났다. 철근이 누락돼 인제대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주민을 통제하지 않고, '도색 보수'라고 위장한 채 천막을 치고 보강 공사를 벌였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인데 주민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안전불감증에 혀를 차게 된다. LH 측은 철근 누락 아파트의 시멘트 강도에는 문제가 없어 전면 재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비파괴 검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건설 현장의 설계·시공·감리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가 밀접하게 공동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구조설계 업체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10명 중 5~6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공사 현장엔 숙련도와 소통능력이 떨어져 지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영세한 감리업체가 발주처와 시공사에 끌려다녀 문제점이 발견해도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공 건설사가 설계 감별 능력을 키우고, 모토홀 공법을 발전시켜 공사 현장 표준화를 앞당기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건설 현장의 적당주의, 나태와 태만, 안전불감증, 비리 등 수십년 인습과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조치가 소용없을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집안 대소사 결정 중학생 자식에게 맡기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노인의 투표권 비중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이가 중학생 시절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고 하더라. 민주당에게선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고려했을 뿐 1인 1표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 인식대로 남은 수명을 따져 투표권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면 정당은 초선 의원, 군대는 이등병, 직장은 신입 사원, 가정에선 어린이가 하지는 대로 해야 합리적이 된다. 그 '합리'대로면 김 위원장 집안 대소사는 중학생 자식이 결정해야 한다.

다. 누가 김 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하면 김 위원장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할 텐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표를 얻으려고 노인인 청년을 갈라 물의를 빚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과거 당 의장은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했고, 한 의원은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노년투표 못 하게 여행 예약해 줬다'는 인터넷 글에 "진짜 효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청년을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정책부터 철 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408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겼다. 모두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걸 바로잡아 청년과 국민 신뢰를 얻자고 하는 게 민주당 혁신위원장 할 일 아닌가.

결국 현실화된 ROTC 미달, 병사들 표만 챙길 때 아니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장교(ROTC) 지원자가 부족해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기간을 늘려도 지원자가 부족했다고 한다. 병사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ROTC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 사상 최저(1.6대1)를 기록했다. 2014년 6.1대1에 비하면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총 5000명의 지원자 중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면접 과정에서 탈락자를 감안하면 실제 선발 인원은 정원인 140명만 채워질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대학의 ROTC는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미 문 닫은 학군단도 있다. 선발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안에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미달할 것이라고 한다.

ROTC는 전체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한다. ROTC 지원자가 없으면 필요한 초급 장교를 채용 수가 없다. 학사장교나 사관학교

도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부사관 지원도 줄어 중사는 3000명, 하사는 8000명이 부족하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핵심 중추다. 이들이 없으면 이지스함도 전투기도 잠수함도 움직일 수 없다. 장교, 부사관의 사기가 떨어진 부대는 오합지졸이다.

대학생들은 "병사에 비해 복무 기간은 10개월 길고 월급은 비슷해지는데 뭐 하러 장교로 가겠느냐"고 말한다. 역대 정부의 복무 기간 단축 정책으로 일반병은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는 55년째 28개월이다.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에 따라 2025년엔 장교나 병사 월급이 차이가 없어진다. 근무 여건은 열악한데 당직 수당은 경찰·소방관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건물에서 생활한다. 이러니 누가 장교로 근무하려 하겠나.

군은 당직 수당과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을 약속했다가 예산 문제로 지키지 못해 불신만 자초했다. ROTC 복무 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숫자 많은 병사 표심만 살필 때가 아니다.

자유진영, '가치·담론 투쟁'서 우위에 섰다...7.27 좌파공세 '힘'으로 꺾었다

평택 미군기지 포위 공세 분쇄에 성공 | 좌익 점령 대법원 KBS 등 곳곳에서 수복작업도 착착 진행중

【북·중·러 전체주의가 장악한 대한민국】

문재인 5년 동안, 한반도 가치 투쟁과 힘의 투쟁에선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이 공세를 취했다. 이유는 자명했다.

- ▲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었고
- ▲ 한·미·일 협력이 부진했고
- ▲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자유 연대가 완전히 망가졌고
- ▲ 제도 언론이 좌익 또는 양비론으로 갔고
- ▲ 공·사 교육이 주사파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아직도 미완성 상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 3개월이 지났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사법부·언론·교육이 여전히 빼앗긴 들밭이다.

- ▲ 공영 방송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 6.25" 어쩌고 떠든다. '남침'이 아니라 "서로 총을 겨눴다"란 속임수다.
- ▲ 공·사 교육은 좌익 교사들과 586 운동권의 이권 카

르텔 + 홍위병 양성소가 되었다. ▲ 국회는 이재명 개인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 ▲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 운동권]으로 발 벗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재판을 3년 반씩 끌었다.

7.27 기점으로 반격 시작됐다

좌익의 이런 일방적 우세는 그러나, 휴전 70주년을 전후해 극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했다.

- △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법 방패]를 하다가 개망신만 했다.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 △ 대법원 판사 구성이 보수 6명, 운동권 5명으로 역전되었다. 김명수도 9월이면 집에 간다. 아니, 검찰청으로 갈지도 모른다.
- △ KBS에선 이영종 기자의 민노총 방송 타파 투쟁이 국민적 열풍을 일으켰다.
- △ 교권을 침해하던 학생인권조례도 깨질 것이다. 교육계 이권 카르텔도 깨질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사태에 항의하는 교사 5만 명 집회에, 전교조는 아예 끼이지도

못했다. △ 국제정치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의 승세는 확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 협정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외쳤다.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자유 국가 연대와 한미 동맹에 기초해, 전 세계 자유 평화변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8월 18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휴양지에서 한·미·일 3국만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핵·미사일, 북·중·러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항해가 모처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평택 대첩

그렇다면, 국내 힘의 투쟁에선 어떤가? 통쾌한 일이 일어났다. 7월 27일 좌익은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를 포위하려 했다. 그러나 그 흥제는 풍가루처럼 분쇄되었다. 평화문을 달았던 전투적 자유인들의 거대한 인파와 함성이 저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평택 대첩(大捷)이었다. 만세!

이 기세로 가자.

△ 한반도에서 △ 우크라이나에서 △ 대만해협에서 △ 남중국해에서 △ 서태평양에서,

대한민국은 해야 할 바를 할 것이다. 가치 투쟁과 힘의 투쟁 양면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더는 밀리지 않으리. 더는!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총성 멎었지만, [상징전쟁] 70년째... 7.27을 보는 상반된 관점



평양것들, 송진기법으로 상징 조직 국내외 중북·친북·PC좌파들, 종전선언·평화협정 선전선동 자유인들, 대한민국과 UN이 전체주의 침략 저지에 성공한 것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7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